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9월

전문가 기고

소셜택소노미와 사회가치 경영

주요 이슈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ESG 동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주요 통계

소셜택소노미와 사회가치 경영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선

EU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2021년 7월 소셜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발표 후, 약 두 달간의 공개 피드백 과정을 거쳐 2022년 2월 최종안을 발표했다. 초안과 최종안에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 모두 처음부터 EU 지속가능금융전략의 핵심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린·소셜택소노미는 무엇이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 금융자본의 조달 및 투자 확대를 꾀하고 기업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은 동일하나 그린택소노미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소셜택소노미는 국제인권장전 등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그린택소노미는 전체 경제주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특정 활동에 더 많은 자본을 할당하는 것인 반면, 소셜택소노미는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결과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와 관련된다.

소셜택소노미는 ①사회적 목표의 설정 및 표명, ②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기여, ③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음, ④최소한의 안전장치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가치사슬 근로자 포함), 최종 소비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과 웰빙,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 구축이다. 최종안은 법제화시 국내 입법의 기본 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를 '상당한 기여'로 인정하는 방법과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등 국제표준을 참조하는 방법 중에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그린택소노미와 달리 최종안 발표 이후 어느 국가

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소셜택소노미 구축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차별금지, 소비자 보호 등 소셜택소노미를 구현하는 세부 항목은 기존의 경영평가 내지 GRI보고서에서 다뤄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마치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면 환경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관점과 동일한 수준의 이해이다. 소셜택소노미의 실현은 단순히 지역주민 대상 행사개최, 근로자의 임금 향상, 취약계층 한 명을 추가 고용하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설계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기여' 항목은 사회적 가치 측정이 병행되어야 관리할 수 있다.

소셜택소노미 구축의 지난한 과정을 단축시키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은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찍이 근로자·소비자·지역주민을 이해관계자로 설정해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적어도 이 세 그룹에게 기업활동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화, 가치사슬 내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협업, 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성과를 정량, 정성, 화폐가치 환산으로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론 또한 가지고 있다. 향후 소셜택소노미의 구축과 기업의 전략 수립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화 전략,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김천구 연구위원

폐기물 증가,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늘어나며 경제에 투입된 물질을 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자원순환이 핵심분야로 떠오르며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중이다.

① 순환경제의 부상

산업혁명 이후 경제는 자원의 조달,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의 과정이라는 일방향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구조였다. 지금까지의 선형경제는 폐기물 증가,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형경제가 가진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라고 한다.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2050년까지 사업장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기 위한 '2050 Net-Zero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에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2019년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에 합의하였는데 이것은 EU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신산업을 선점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EU는 순환경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섬유·건축·전자·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제품정책체계, 순환형 모델로의 이행, 잠재력 높은 산업 분야의 시책, 폐기물 삭감 등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하였다.

EU 그린딜 주요 정책분야



※ 자료: European Commission

② 순환경제 구축동향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순환경제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핵심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도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순환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여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의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필요가 있다. 사용 후 폐기 과정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순환경제 부문을 모든 산업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각 산업마다 순환경제와 관련한 성장성 그리고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핵심 산업을 먼저 정한 이후 여타 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순환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은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산업이 꼽힌다.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경우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정제-분해-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산업에 있어서 사용 규제 강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미래 산업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폐배터리 문제도 순환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며 2029년에 폐배터리가 약 8만개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전자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통해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

구분	내용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유도 -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
친환경 소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을 소비자가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 - 지자체, 배달업 업체,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
폐자원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방,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 활용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확대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신새미 연구원

미국의 IRA 입법화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9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로써 자국의 친환경 산업에 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2024년부터 유효한 이 법안은 총 3,91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산업 지원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산업은 세액 공제가 10년 이상 적용되며 전력망 투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집행한다. 수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대상은 전기·수소차 부문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매입세액공제, 생산 설비 신설 보조금 등을 합하면 혜택이 5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인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 주로 풍력에 적용)의 일몰과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 태양광, 해상풍력 등에 적용)의 축소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지연되면서 보조금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PTC와 ITC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친환경 산업의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세액공제 혜택(Section 45X -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 포함되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가치 사슬을 마련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국 내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들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리고 희토류 등의 핵심 광물이다.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산업별로 차별적이다. 먼저 미국 내 제조 설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므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역시 미국에서의 제조분에 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지 않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지원내용 요약

지출 및 세금 감면			저축 및 수입		
분야	프로그램	금액(십억 달러)	분야	프로그램	금액(십억 달러)
① 에너지 및 기후대응	청정전력	-161	① 보건	처방약 리베이트 폐지	122
	대기오염, 유해폐기물, 교통 및 인프라	-40		약품 가격 협상	96
	개인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37		처방약 가격 상한제	63
	청정생산	-37	② 재정 수입	15% 최저법인세	222
	청정연료 및 자동차	-36		국세청 과세 집행 강화	101
	환경보전, 농촌 개발 및 임업	-35		1% 자사주 매입 수수료	74
	건물 에너지 효율, 전동화	-27		초과 영업손실 제한 2년 연장	53
	기타 에너지 및 지출	-18		메탄, 슈퍼펀드법 등을 통한 수수료	7
② 보건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확대 및 연장	-64	합계	738	
	Part D 개정, 저소득 보조금(LIS), 백신 커버리지, 인슐린	-44	순 재정적자 감축	238	
합계		-499	합계		738
			순 재정적자 감축		238

※ 자료 : 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개)

	'21.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145	151	162	172	183	186	188	199	203
사회적채권	788	794	820	835	871	912	946	966	1,006
지속가능채권	216	230	233	237	246	279	304	305	309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천억 원)

	'21.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148	156	168	173	183	185	186	191	194
사회적채권	1,273	1,273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지속가능채권	180	175	181	182	186	199	213	217	220

2. ESG 평가

EU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주요 내용

투자대상	평가 내용
기업	① 온실가스, ② 탄소발자국, ③ 투자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④ 화석연료 분야 기업과 연관성, ⑤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⑥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⑦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⑧ 폐수 방류, ⑨ 유해 폐기물 비율, ⑩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⑪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⑫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격차, ⑬ 이사회 내 성별 구성, ⑭ 논란이 되는 무기(대인지뢰, 화학무기 등)에 대한 노출 정도
국가	① 투자 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②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투자 대상국 비중
부동산자산	① 화석연료와 부동산자산의 연관성, ② 비효율 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

* 금융 기관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3월 10일 공식 발효됨

3. 기타 통계

ESG 데이터 제공기관별 ESG 점수 상관계수

기관명	MSCI	Sustainalytics	RobecoSAM	Bloomberg
MSCI	1	0.53	0.48	0.47
Sustainalytics		1	0.76	0.66
RobecoSAM			1	0.68
Bloomberg				1

자료: State Street, 신한금융투자 '컨센서스를 활용한 기업별 ESG 분석'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8월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9월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김천구 연구위원
T. (02)6050-3140 | E. ck1009@korcham.ne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